

“공수처 차장 검찰 출신 가능… 현직검사는 안받겠다”

위장전입 사과... 위헌 질문에 “권력분립 위반 아냐” 반박 “피의사실 흘려 망신 주기·압박 수사 관행 답습 않겠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차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위헌 주장’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고 말했고,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여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며 “지금에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후보로서 지명을 받았겠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주저했을 것”이

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 “피의사실을 조금씩 흘리면 피의자를 망신 주거나 압박해 수사했던 관행들이 있다면,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차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양하게 검토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출신 직종에 따라) 입장일당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정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정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정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 없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차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차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왔을 때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송기현 의원의 질문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를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서울시장 후보 이상호·박영선 양자대결 유력

27~29일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 다음달 2일 유튜브 국민면접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4·7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 면접은 기존의 심사위원 대면 대신 언택트 ‘국민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서울·부산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주거, 환경, 복지 등 주민 생활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문제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언택트 국민면접은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과 외부인사로부터 사전 질문을 받고 2월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4·7 재보궐선거 공천관

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일정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상호 의원과 곧 출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양자 대결이 예상된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전날 불출마를 선언했고, 박주민 의원은 불출마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시장에는 김영춘 전 국회의사총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이 출표를 던졌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조만간 사퇴 후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최택용 전 중앙당 SNS 대변인도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결과를 내야 하겠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중요시할 부분은 코로나 불명등을 어떻게 완화하고 극복하느냐. 경제적 불명등 못지않게 교육 불명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에 직접 관여돼있지 않더라도 당과 후보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사회 격차 완화를 위한 이익공유제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주목해 당에서 추진하는 데 더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우리 나름의 프로그램은 제시하고 입법 사항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르면 오늘 개각... 3~5개 부처 장관 교체

농림에 김현권 전 의원·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물망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 3~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임자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으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강성원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일각에서는 기업인 출신 등 외부 인사 발탁설과 함께 당분간 강 차관이 장관직을 수

행하는 직무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수부 장관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주당 김현권 전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문체부 장관은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내각 내 여성 비율을 고려해 여성이 발탁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성 장관 후임으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5선의 조정식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아특별·한전공대법 다음달 통과되나

여야, 2월 임시국회 개최

여야가 내달 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19일 합의하면서 지역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별)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에 직접 관여돼있지 않더라도 당과 후보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내달 1일 개최

식,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는 등의 임시국회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은 2월 4일과 5일, 8일에 실시된다. 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5일은 경제,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상이다.

법안소위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한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이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에 열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청년 사회 참여 지원 ‘청년수당’ 지급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19일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일명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담,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해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탁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 cu08171@cu.co.kr ☎ 1644-7990

<p>☎ 266-4150</p>	<p>☎ 573-4150</p>	<p>☎ 528-4150</p>	<p>☎ 572-4150</p>	<p>☎ 576-4150</p>	<p>☎ 513-4150</p>	<p>☎ 264-4150</p>
-------------------	-------------------	-------------------	-------------------	-------------------	-------------------	-------------------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